

“전북 교통혁신 철저히 준비해야”

민주 이성운 의원, 전북자치도의회와 토론회 열고 대광법 개정 후속 과제 논의
강희업 국토부 차관 “교통인프라 소외돼 온 전북, 균형발전 모범 사례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24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대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북의 교통 불균형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와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정동영·김운덕 의원이 함께 했고, 대광법도민추진위원회와 전북연구원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기초강연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강 차관은 대광법 개정 당시 국토부 대광위원장으로써 법안 논의 과정에

서 이성운 의원과 긴밀히 협의해 온 인연이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도 흔쾌히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운 의원은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전북이 교통 소외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

발점”이라며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기회 접근권과 이동권이라는 헌법상 권리가 회복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제는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년 상반기) 반영, 예산 확보, 도로법 개정 등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실행과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강희업 차관은 “지역균형발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전북은 지금까지 교통 인프라에서 소외돼 온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획을 크게 수립하고 강력하게 이행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해 국토부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를 통해 전북과 전주가 앞으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할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북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추진에 도민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성운 의원은 지난해 7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같은 해 9월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개최한 뒤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정창대 당시 법사위원장과 맹성규 국토위원장 등 여야 핵심 인사들을 설득하고 의원들에게 직접 친전을 발송하는 등 대광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



기본소득당 옹혜인 대표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북 임실과 전남 고흥을 방문해 지역 청년 농어민·소상공인들과 ‘농심 공감 토크’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옹혜인 의원실 제공〉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정착 마중물”

기본소득당 옹혜인 대표, 임실 등서 ‘농심 공감’ 간담회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법 당론 발의… 연내 제정 나서기로

기본소득당 옹혜인 대표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북 임실과 전남 고흥을 방문해 지역 청년 농어민·소상공인들과 ‘농심 공감 토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법 제정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임실 치즈마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농촌 유학 학부모, 귀농 청년,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참석해 농촌 생활의 어려움과 정착 문제를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교통, 교육, 돌봄 같은 공공서비스가 함께 갖춰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농업 지원이 대규모 농가에 집중돼 소외감을 느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고흥 간담회는 유기농 유자 농부와 귀향 청년들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하면서도 생계가 어려워 일바를 병행했다”며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지역 정착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컬푸드를 강조하지만 인구가 적은 농촌에서는 유통망 확보조차 벅하다”는 현실도 지적했다.

옹혜인 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이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여유와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호남권 일정을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충청·영남권에서 순차적으로 입법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국민 주도의 입법청원 운동을 통해 연내 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 하반기 도정 주요 현안 선제대응

김관영 도지사 “새정부 국정과제 진행… 도정 변곡점”

전북특별자치도가 하반기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도민과의 약속 이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24일 열린 합동간부회의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정부 국정과제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진행되는 도정의 변곡점으로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전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연고 국무위원 등 부여된 여건들을 잘 활용하여 전북을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할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부 2차 추경 이후 본격화되는 중앙 공모사업과 관련해 “전북에 꼭 맞는 신규사업을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한 발 앞선 전략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북이 강점

을 지닌 분야는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 상대적으로 열위한 여건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치밀하게 보완해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정 3주년 성과브리핑, 도민과의 대화 등 그간 도민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 이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라”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주 폭우와 다가올 폭염에 대해서도 여러 주문이 이어졌다.

김 지사는 “지난 집중 호우로 인한 가축 폐사, 농작물 침수 등 현장의 상처를 조속히 치유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복구를 지원하라”고 지

시했다. 그러면서, “폭염은 이미 사회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무더위 쉼터 등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신속히 완료하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차원에서 수난사고 예방과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하절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장들에게 “정책이 도민의 삶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출자·출연기관은 도정가치를 도민 곁에서 실현해나가는 최일선 주체인 만큼, 주 1회 이상 정책고객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김솔지 도의원, 균형발전 영향평가 의무화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솔지 의원(비례)은 제420회 임시회에서, 국가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앞서 해당 정책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균형발전이 국가적 과제로 제기돼 왔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며, “현 정부가 제시한 5국 3특 전략이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고 있다면, 이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이 특정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처럼 공식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사전 평가를 의무화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제도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공공 가치”라며,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예산과 정책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구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공공기관 이전, 대규모 국책사업,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면 지방은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며, “정책 시행 전에 지역 간 영향을 면밀히 따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기존 행정구역 중심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5국 3특 전략에 부합하는 평가 지표 및 항목 개발, 국가 중요정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법제화,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및 사전 예방적 적용 의무화 등이 담겼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순창 수해복구 나서

당원 130명 긴급 투입… 인계·금과면서 복구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순창군 일대에 당원 130명을 긴급 투입해 수해 복구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24일, 인계면과 금과면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실질적인 복구와 지역경제 지원을 동시에 고려한 현장 중심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당 민생지원팀은 앞서 순창 지역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순창군과 협력해 피해 실태를 확인하고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각 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이 침수 농가 및 주택 피해 현장에 투입됐다.

인계면 블루베리 농가에는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위원회 당원들이 투입돼 모국 정리와 농지 평탄화 작업을 펼쳤고, 금과면 딸기하우스 현장에서는 당원들이 조를 나눠 하우스 내부 물청소와 잔해물 정리에 힘을 모았다.

이번 복구 작업에 사용된 장갑, 장화, 수건, 음료, 도시락 등 물품은 모

두 순창 지역 삼정에서 구입돼, 침체된 지역 상권에라도 작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됐다. 수해 복구와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을 함께 도모한 것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수해 직후부터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당원들이 직접 구슬땀을 흘린 복구 작업이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끝까지 피해 복구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 이 절망 속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해 복구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난관리 시스템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김천시의회
우호 증진의 시간 마련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4일, 자매결연 도시인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 방문단을 맞이하며 뜻깊은 우호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천시의회 방문단은 나영민의장을 비롯한 의원 16명과 사무국 직원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김천시 농특산물 교류 행사 등을 위해 군산을 방문했다.

김천시의회 방문단은 먼저 군산시청 상황실을 찾아 시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눈 데 이어,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후에는 군산시청 광장 내에 마련된 김천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함께 돌아보며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 현장을 견학했다. 또한 근대역사박물관 등 군산의 주요 문화시설을 방문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 도시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졌다.

/군산=김민호 기자

“하현호 구속, 과도한 처벌… 국보법 폐지해야”
법원, 2심서 실형… 혁신당 “시대착오적 문제점 다시 드러나”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하현호 대표에 대한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대에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성수 정책실장은 24일 논평을 통해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가 하현호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이라며 “국가보안법의 시대착오적인 문제점이 다시 드러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훨씬 더 무거운 판결이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해방과 분단, 냉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정된 법으로, 당시에는 안보 논리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사용됐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시대”라며

“이제는 정치적 표현과 비판, 연대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제7조 ‘찬양·고무죄’에 대해선 “자의적 해석과 과잉 처벌의 위험이 크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우선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시민사회 활동이나 비판적인 목소리에 계속해서 공안 프레임이 씌워질 수밖에 없다”며 “법은 권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여야지, 억압의 도구가 되어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와 공동체의 우려도 깊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오랜 기간 노동과 농민, 통일운동에 헌신해온 지역 시민 운동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국가보안법은 이제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걸맞게 해체되고 재구성돼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지를 나타냈다.

김만기 위원장은 “한빛원전 인근 지역인 고창은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최일선 지역으로,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고준위 폐기물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